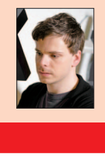
광남일보

농어촌공사-전남대, 디지털 혁신 '맞손'
농어촌 분야 AI·데이터 등 상호 협력 7

강진 반값여행, 지역경제 '훈풍'
올 1분기 2만7000여팀 참여…48억 소비 8

정철원 담양군수, 군정 비전 실현 '박차'
역점사업 85건 등 추진상황 점검 9


장애·비장애 예술로 하나 되다
亞문화전당, '배리어 프리 전시' 복합전시6관 11

조간 제7827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음력3월24일)

'함께 달리는 희망의 페달'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19일 광주 서구 영산강 자전거길 에서 열린 '함께 달리는 희망의 페달 텐덤바이크 라이딩' 행사에 첨석한 김이강 서구청장과 자원봉사자들이 시각 장애인들과 2인1조로 힘찬 라이딩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정부, 12조2000억 규모 추경 편성

AI도 민생도 빠졌다…국회서 반영 절실

광주시, AI데이터센터 등 670억 요청 불구 25억에 그쳐
전남도, 여수산단 지원금 50억 전망…대부분 현안 제외
통상·재난 등 집중…"예산 심의 과정서 추가 포함 노력"

정부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광주와 전남의 주요 현안 사업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필수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긴급 편성한 이번 예산은 중앙부처와 수도권 중심 사업에 집중된 반면, 지역 현안은 대폭 제외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15면

이에 따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심사 과정에서 국비가 추가로 편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2조2000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규모보다는 약 2조원 늘어났다.

정부는 세계잉여금과 기금자금 등 4조1000억 원, 국채 발행 8조1000억 원을 재원으로 충당한다. 분야별로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3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최근의 산불피해와 더불어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감액된 예비비 가운데 1조4000억원을 증액한다.

정부는 연내 신속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개 부처의 93개 사업을 추려냈다면서 '필수 추경'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이번 추경에서는 광주와 전남이 요청한 핵심 예산 대부분은 빠졌다. 광주시는 인공지능(AI) 관련 예산 670억 원을 요청했지만, 최종 반영된 금액은 25억 원에 불과하다. AI 클러스터 핵심 인프라인 국가AI데이터센터 운영 예산이 사실상 누락되면서, 센터 가동률도 당분간 절반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해당 센터가 지역을 넘어 국내 AI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기반 시설이라며 정부에 예산 반영을 지속 요청해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가AI데이터센터는 광주만의 시설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판을 여는 국가 자산"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도 이 같은 상황은 다르지 않다.

여수국가산업단지의 고용유지 지원금과 위기지역 대응자금 50억 원 정도만 포함됐다. 석유화학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여수산단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된 셈이다. 이 밖에 무안국제공항과 여수공항의 활주로 방위각 개선,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 등 일부 항공안전 사업에는 국비가 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역 주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지원 예산은 대부분 빠졌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지역 현안을 일괄 배제한 배경에 대해 "국가 전체의 시급한 사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광주와 전남 뿐만 아니라 지역 사업은 전반적으로 축소되거나 제외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을 시도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AI산업은 단기 성과보다는 미래 투자라는 점을 국회에 강조할 것"이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예산 추가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역시 국회 대응 TF를 꾸리고 예결위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예산 반영을 위한 설득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안 사업 중 일부는 중앙부처 단계에서조차 반영되지 않아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끝까지 지역 민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추경 예산의 세부 구성과 총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지만, 증액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국회 예산 논의가 대체로 증액보단 감액 중심으로 흘러가는 관례를 고려할 때, 지역 예산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악성 미분양 줄었지만 시장 회복 '글쎄'

전남 2401호 5개월째 감소…LH 직매입 기대
물량 해소 더디고 신규분양 많아 비관론 여전

전남지역에서 최근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증가세가 꺾이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 입주 물량이 많은 데다, 미분양 해소 속도도 더뎌 부동산 시장 한파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시각도 팽배하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남의 준공 후 미분양은 2401호로 집계됐다. 전달(2445호)과 비교해 44호 줄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공사가 끝난 뒤 사용검사까지 마쳤지만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다. 전남의 준공 후 미분양 추이를 보면 지난 2023년 5월(1196호)을 기점으로 1000호를 넘어섰고, 지난해 7월(2502호)에는 2500호를 뛰어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9월(2558호)까지 2500여호를 유지하던 전남의 준공 후 미분양은 이후 5개월 연속(10월 2480호→11월 2452호→12월 2450호→1월 2445호) 감소세를 그리고 있다.

이는 연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와 연내 추가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역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약 3000호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밝히면서 시장 회복론에 불을 지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전남 분양시장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은 여전하다.

정부의 정책들이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 지역 내 적체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워낙 많은 탓에 단시간 내 소화가 어렵다는 관측이다.

쏟아지는 입주 물량도 걸림돌이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지난 3월 발표한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를 보면, 전남에서는 올해 7199호, 내년에는 5316호가 예정 돼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대책은 대부분 미분양 주택을 최대한 사들이는 방법이라 단기성이 짙다"며 "더욱이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장기화 중인 침체가 당장 해결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尹 오늘 두번째 재판…'피고인석' 처음 공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식 재판이 2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이 허가돼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처음 공개된다.

다만,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첫 공판에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진술에 이어 조 단장과 김 대대장에 대한 검찰 주신문이 이뤄졌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도 직접 마이크를 잡고 발언할지도 관심이다. 그는 첫 공판 때 모두진술에서만 82분을 발언하는 등 총 93분간 직접 발언을 쏟아내며 변론을 주도했다.

연합뉴스